

“키우랄 땀 언제고”... 사육곰, 정부가 책임져라

농가소득 증진위해 권장... 국제 여론에 수출길 막혀

환경부장관 “보존가치 없다”... 협회, 매입·시설비 촉구

나주시 노안면과 반남면에서 반달 가슴곰 42마리를 키우고 있는 유현재 (60)씨는 사육장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곰 사육 농가 문제는 정부 지원 없이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말에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다, 지난 17일 제주의 한 사육장에서 곰의 공격을 받아 사육사가 숨졌기 때문이다.

유씨는 ‘곰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소리에 20년 전, 6000만원을 들여 곰 10마리 사왔다. 하지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수출 목적으로 일본·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사육을 허용한 과거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곰의 국제교역이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워도 팔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인건비와 시설 유지

비를 뺀 사료 값만 한 해 4200만원이 든다는 게 유씨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곰 사육을 시작한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19일 전국사육곰협회는 “20일 환경부를 방문해 정부의 사육 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전국 사육 곰의 정부 구입 ▲다른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전국 곰 사육 농가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농가를 우롱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농가에 대한 국가 배상 및 해결 방안은 전 정부에 따져야 한다.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광주 1농가 8마리, 전남 13농가 164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80~90년대 웅담 등 곰의 국내 수요가 높고, 수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육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지난 1993년 멸종위기예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수

출길이 막혔다.

유씨는 “국내에서는 현재 10년 이상 사육한 곰만 도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냐?”면서 “이번 환경청 방문에서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세초시에 아예 곰을 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곰 사육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곰 사육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암암리에 웅담 등을 유통하는 등 곰 사육은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오광록·박정렬기자 kroh@

전기로 평균 5.4% 인상

내일부터 주택용 2.7% 산업용 6.4% ↑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이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가장 많이 오른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삼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도 여름철 요금(일반

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월